

# 삼일해방사상의 행정철학적 합축에 관한 연구\*

고 창 훈\*\*

## 목 차

- I. 행정과 운동
- II. 20세기 상황과 정치행정적 질서
- III. 삶의 경험과 의식형태
- IV. 3·1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내용
- V. 3·1민족해방사상의 논리와 체제에 대한 대안적 의미
- VI. 3·1민족해방사상의 행정적 합축

## I. 행정과 운동

이 글의 목적은 운동과 행정이 접촉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속에 생성된 三·一민족해방운동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시사하는 행정적·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려는 데 있다. 필자는 그것이 내포하는 맥락을 (1) 운동적 맥락 (2) 행정적 합축 (3) 현재적 합축 세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전제를 가정한다.

우선 필자는 행정을 피치자의 의미있는 삶의 경험과 거기에서 생성된 사상을 수용하고 제도화시켜 체제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 운동은 정치·행정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에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집단적인 행동이라 정의한다. 운동과 행정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때 운동이 포괄하는 영역과 체제가 관계하는 영역이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공유하지 않는 고유의 영역들도 있다. 운동이 체제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운동의 관심사가 행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행정을 넓게 파악하여 행정조직의 내부만이 아니라 행정과 사회가 접촉하는 외적 관계는 물론 체제에 비판적인 재야의 활동까지 포괄하며 그 연구대상은 운동과 행정이 공유하는 영역에 한정짓는다.<sup>1)</sup> 이러한 입장에서 설 때 행정의 주체를 일반국민까지

\* 本 論文은 1989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법정대학 행정학과

1) 이종범, 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pp. 5-6.

포괄시키게 될 뿐더러 政治·行政一元論의 입장 역시 수용하게 된다.

둘째 한국의 역사속에 생성된 삼일해방운동을 해석할 때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문제해결의 의식을 형성해내고 나아가 체제에 대한 代案提示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삶의 경험이란 개인의 유아시기 일상생활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얼핏 보면 아주 보잘 것 없고 작은 경험이다. 행정을 개혁한다는 것은 작고 미미한 것이 아니라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보잘 것 없이 작은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큰 행정개혁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계 행정개혁적 안목을 갖고서 역사적 사례가 시사하는 운동의 의미를 검토하는 본 연구는 어떠한 행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가의 편견개입을 배제할 수가 없다. 偏差가 개입되는 해석과 해석기준, 이 해석과 현실과의 심한 괴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현재적 타당성 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본 연구가 상정하는 행정의 이상형은 동시대에 있어서 민주적인 삶의 원리를 반영시킨 행정이다.

네째 운동과 행정의 접촉관계를 체제와 연관된 운동가들의 삶의 경험에서 인식하려면 현상학적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현상학적 탐구는 삶의 경험이 의식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안적인 문화의 틀을 갖게되는가에 관심을 둔다. 때문에 필자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체제에 대한 절망적인 경험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의 경험들이 그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식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때문에 각 운동의 성찰은 동시대의 삶의 문제, 의식의 문제, 그리고 대안형성의 문제에서 상호 모순되지 않는 사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 의미있는 운동은 실증적인 과학주의에서 말하는 계량화 가능한 사실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능케한 심층의 정신과 실천을 고려하기 때문이다.<sup>2)</sup>

## II. 20세기 상황과 정치행정적 질서

### 1. 경제사회적 상황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열강은 식민지 영토분할의 경쟁을 벌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이 산업화의 여세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확장하고 식민지건설에 나서 제국주의적 세력확장에 나선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을 합병시키려는 침략계획을 진행한다. 드디어 그들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탈취함으로써 내정간섭의 장치를 마련 합병

2) 고창훈, "한국행정의 실천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행정학 박사학위논문), 1990, pp.1-35.

의 발판을 구축한다. 일본은 1910년 조선 황제는 조선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천황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합병하였다.<sup>3)</sup>

1910년대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1876년 개항이후 일관되게 관철한 일제의 경제침략전략과 그로 인하여 조선경제가 식민지 체제로 개편되어 조선사회는 식민지 사회로 재구성하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일제는 조선경제를 그들의 체제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강요에 의해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이래 정치적, 군사적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경제침략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켰다. 예를 들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과 동시에 對韓施設綱領을 통해 일제가 한국을 독점하는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흡수하는 계획을 집행한 사례, 1904년 이후 메가다(日賀田種太郎) 계획을 추진하여 일본의 상업자본에 편입시킨 조치가 그러한 사례들이다.<sup>4)</sup>

그들은 한국의 강제적 병탄과 함께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한국을 자신의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로 예속시켜 나간다. 1911년 그들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면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일본 자본에 의한 식민지 경제를 재편해 나간다. 그들의 정책은 이중논리로 한국의 시장을 재편해 나갔는데, 하나는 일본의 상업기반을 확충시킨다는 차원에서 근대적인 제도와 시설을 도입하는 조치를 계속 진행시키는 한편, 또 하나는 한국 나름대로 독자적인 상업발전을 통제·제한하는 정책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들의 조치들은 모두 이러한 이중의 목적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었는데, 1909년의 도량형법의 제정, 1912년의 朝鮮關稅定率令, 1914년의 시장규칙, 1915년의 조선상업회의소령 등의 조치가 다 그러했다. 요약하면 일본의 상공업 정책은 일본을 위하여 한국의 경제를 재편함으로써 식량 및 원료공급지, 상품시장의 식민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목표를 전제하고, 일본은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정비하고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정도 발달을 촉진하였는 바, 그만큼 한국의 경제를 독점·통제하는 수단과 법률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지배하였다.

1910년대 조선인 공업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일제의 민족차별적 정책과 집중된 자본의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상인들이 무역업, 도매업등 중요 부문을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상인들은 상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매상인, 객주, 여각, 행상으로 전전하면서 국내 상업과 市場등을 주요무대로 활동하였다. 그만큼 조선인 자본가 계급은 미숙할 수 밖에 없었고, 노동자들 역시 일본인 또는 총독부 직영형태의 공장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와 일인 자본가 및 일제당국 사이에는 계급적 모순 뿐만 아니라 민족적 모순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상인 및

3) 이정식, "1910년대의 국제정세", 한민족 독립운동사 3·1운동(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시사문화사, 1988, pp. 3-33.

조민, "제1차세계 대전 전후의 세계정세", 3·1민족해방운동 연구(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서울, 청년사, 1989, pp. 41-76.

4) 권태여, "식민지 초기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인 상공업", 3·3·1민족해방운동 연구: 3·1운동 7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청년사, 1989, pp. 105-140.

광공업자들은 노동자, 농민과 마찬가지로 3·1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sup>5)</sup>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력한 정책은 농촌의 식민지화 조치였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농정정책은 두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그 하나는 각종 산업단체, 지주회, 권업 모범농장등 일인 중심의 이익단체를 만들어 정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켰고, 또 하나는 일제 자본이 유입과 수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구를 창설해 나가는 것이었다. 전자는 통감부를 중심으로 쌀, 면화, 잠업, 축우 등 4대 농산부문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에서 유통과정에 이르기 까지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를 시도해 나갔다면, 후자는 일제 자본의 유입통로인 식민지 금융기구의 확립이었다. 식민지 초기의 금융기구의 확립과정은 부분적인 등기제도가 실시되던 1912년을 기준으로 하여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전 단계는 잡다한 금융기구를 만들므로써 일본인 곡물수출 상인과 조선인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성 상업대출을 주로한 것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농공은행의 보조기구로서 지방금융조합을 설립을 비롯하여 1914년 신농공은행령, 1918년 식산은행령을 선포 각지의 농공은행을 통합 식산은행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일제는 위와같이 법령과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식민지 금융기구를 정착시켜 나갔다. 1910대의 농업정책은 금융기구의 정착과 그로 인한 지원을 받은만큼, 공업·상업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체계화되었다. 그만큼 조선농민은 농업생산·유통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금창출과정에서도 수탈과 억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sup>6)</sup>

조선경제가 일본자본주의에 예속되어가는 독자적인 재생산체계를 상실함에 따라 사회적 계급 구성에도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었다. 1910년의 조선산업 생산이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반봉건제, 그리고 소상품 경제제도등이 상호 복잡한 연관을 맺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시기의 계급구성 역시 이러한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지주, 부르조아계급, 도시 소부르조아 계급, 농민, 노동자 계급 다섯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지주는 농촌인구의 약3%를 구성하였는데, 일제는 그들로 하여금 식민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독려하였다. 그래서 1910년대 대지주들은 일제와 공동 이해관계를 맺게되어 매관적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주들은 생산과정에서는 고을 소작료의 착취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면서 쌀의 상품화 정책에 부응 소작인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1910년대 지주계급 중 일부는 일제의 농촌 지배정책의 이중적 논리, 즉 미곡의 상품화와 토지정책의 강제적 추진에 적응을 못해나가다가 모순된 처지를 자각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5) 엇글.

6) 정태현, "1910년대 식민농정과 금융수탈기구의 확립과정",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서울 청년사, 1989, 141-180쪽. 여기서 식민지 사회의 전근대적 사회관습의 정리와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이식을 중심으로 하여 식민농정의 폭력적 수립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식민 농정경제 형성의 과도기(1904-1911)이며, 또 하나는 식민농정경제의 형성기(1912-1918)이다. 식민지 금융 수탈기구의 확립과정도 과도기(1905-1911)와 형성기(1912-1918)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참여하게 된다.<sup>7)</sup>

둘째 부르조아 계급은 전체인구의 극소수를 구성하였는데,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공업 생산액이 1915년을 고비로 총생산액에 접하는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것과 부르조아 계급의 성장은 그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는 대략 17% 정도였고 대부분 금융업과 상업이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회사는 조선인 자본가들과 일본인들이 합작한 회사들이었는데(1910:16개, 1915:29개, 1919:22개), 이들도 대부분이 금융업과 상업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규모가 비교적 컸다.

회사 자본의 형태를 면 조선인 자본은 규모가 큰 반면, 개인자본의 형태를 면 조선인 자본은 규모가 작고 그 치중분야도 제조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자본은 그 규모가 8배나 되는 일본인 자본과 경합하여야 했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의 분야에서 단지 5개 업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숫자상으로 대등한 인간관계를 이룬 업종은 9종에 불과하였다.<sup>8)</sup>

1910년대 조선 자본은 그 존재방식과 내부구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식민통치에 대하여 두가지 형태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예속자본의 형태로서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일본과 합작투자하여 대규모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단독으로 설립하여 금융업과 상업 분야에 주력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민족자본의 형태를 갖추면서 원료공급과 상품매매를 위주로 국내시장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일제지배에 대립적인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민족자본에 근거를 둔 자본가라 하더라도 민족해방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제국주의에 대항하여야 하는 만큼 민족해방에의 참여를 지향하려는 뜻을 갖지만 또 일부는 경제적 취약성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자의 위치때문에 일제정책에 협조적이거나 투항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세계 소부르조아 계급은 수공업자, 소상공인, 종교인, 교육업자, 변호사, 의사, 약사, 언론인, 기술자 등 자유업 종사자들로서 전체인구의 1% 내외였다. 수공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국내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일제의 거대한 자본회사의 대량상품의 위력에 눌려 판로나 상권을 상실하여 몰락해감으로써 고통을 느끼고 일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자유직업 종사자들 역시 일본인과 차별대우,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 지위에 불안감을 느낀다.

7) 임경서, "1910년대 계급구성과 노동자. 농민운동", 3·1민족해방운동의 연구, 서울 청년사, 1989, pp. 181-266. 지주들은 1910년 후반에 이르러 기부금 납부, 양반의 부역에 대한 동원,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에 강제 규칙의 제정과 시행등의 일제정책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8) 윗글, pp. 197-198. 염직업, 제지업, 재봉업, 목공업, 금속공업등이었는데, 이 업종들은 자본이 영세 하더라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노동력과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판매도 국내의 지방시장에 의존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조선인 자본의 적장 고용 규모는 10인이하가 주류였고(80% 정도) 기계체제를 도입하지 못한 원시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90% 정도)였다.

내계 농민은 전체인구의 85%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봉건구조의 계급적 착취 또 한편으로는 일제의 억압적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온 계급이었다. 그들 대다수는 고율 소작료의 착취에 허덕이며 빈곤을 강요당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77%가 소작제도에 묶여 있었고, 부담하는 소작료의 비율이 50~80%에 해당하는 고율이었다.<sup>9)</sup>

그들은 토지정책과 산림정책으로 종래까지 누려왔던 도지권, 입회권, 영소작권등의 제권리를 상실하였고, 조선총독부의 강제적인 무단농정의 실시로 인하여 그들이 누렸던 농업조건과 농업생산력은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점점 가중되어 1920년에 이르러서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농가 1호당 조세부담액, 1913: 6원, 1920년 13원).<sup>10)</sup>

그들이 받는 부담은 일제세력의 착취 뿐만 아니라 부르조아 계급으로 부더의 압박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일제의 정책은 자본주의 상품의 농촌 침투와 토지침탈을 감행함에 따라 농민들에게 부과된 고통과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소유에 따라 부농, 중농, 빈농의 형태로 분화되었고, 대부분의 농민은 지주제도의 폐해로 인하여 고율의 소작료를 바치고 고리대 착취를 감내하여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생존을 위협받을 처지에 빠져든다. 그만큼 그들은 반봉건과 반제의 민족해방운동에 절실한 이해관계와 필요를 절감한다.<sup>11)</sup>

다섯째 1910년대 조선인 노동자 계급은 자유노동자, 광산노동자, 공장노동자 등이었다. 자유노동자는 개항후 일제 세력이 침투함에 따라 연안이나 철도에서 운반하는 일에서 부터 생성되어 하역노동, 현장 일용노동 및 기타 잡집 노역으로 발전되었는데, 그들의 임금은 저급했고 생활은 불안하였다.

이 시기의 광산 노동자는 3만명정도였고, 임금수준은 평균 82전으로 일본인의 1/3정도로 차별을 받아 열악하였고, 작업환경은 상당히 나빠 산업재해의 빈도가 아주 높았다.(1919:9.7%).

1910년대의 공장노동자는 일제가 식민경제정책에 따라 다수의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급격히 증가하여 5만정도에 이르렀다. 그들은 일본자본가의 착취와 차별을 받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과 부당한 노동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들 노동자 계급은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처지와 민족적 차별의 최일선에 서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계급보다도 민족해방투쟁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이러한 처절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조직적 연대성과 계급적 일체감과 높은 연대성을 확보하면서 자본가의 착취와 제국주의 세력의 압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sup>12)</sup>

9) 윗글, pp. 201-202.

1918년을 기준으로 그들의 38%가 작농, 39%가 자작농이었고, 그들이 부담하는 소작료의 형태는 定租, 執租, 打租의 세가지 방식이었다.

10) 이청원, 조선독본, 학예사, 1936, p. 410.

11) 임경석, 앞글. 이들중 일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외국 이민으로 떠났는데, 1921년까지 10년간 만주로 이주한 이민은 51만명, 일본으로 이주한 이민은 3만 8천명에 이른다.

12) 윗글.

## 2. 정치 행정질서

### 가) 총독부 중심의 통치구조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한다. 조선의 지배계급은 전쟁도 없이 민중의 뜻도 저버린채 일본과의 흥정과 야합에 따라 통치권을 넘겨주어 버렸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의 강점 통치의 영역이 되버림으로써 경제·사회적 예측과 함께 제국주의적 무단정치질서와 행정체계가 등장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합병과 동시에 식민통치를 강압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총독통치체제를 형성하는 일부더 착수하였다. 그들이 세운 총독부 통치구조는 새로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최고기관이며 특수기관이었다. 그것은 1911년 기준으로 행정부, 사법부, 군부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조선식민 통치구조였다. 그들은 총독을 천황의 직속으로하여 육·해군대장 중에서 선발하였다. 총독은 조선 주둔군의 통솔·파견권, 정무총리권, 제령제정권, 총독부령 발포권, 사법기관 감독권등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절대권력자로서 오직 일본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조선의 임금과 동일한 것이었다.<sup>13)</sup>

조선 총독부의 체제는 총무, 내무, 탁지, 농상공, 사법 5부와 그밑에 9국을 두는 행정체제로서 조선의 행정체제를 접수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조선의 중추원은 일본의 무단정치와 강권행정에 대한 자무기구로 전락할 뿐더러 실제 구성원을 조선식민정책에 협조한 친일파로 구성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계층은 일체의 참여가 배제하였는데, 그 인원은 15만명에 이르렀다.

요약하면 일제의 조선통치의 특징은 첫째 직접 통치방식을 채택하여 조선의 권력과 부를 철저히 수탈하는 형태였고, 둘째 조선의 반일운동에 철저히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일본인이 모든 요직을 독점하는 지배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셋째 조선사회의 전통을 파괴하기 위하여 친일파를 철저히 육성. 이용하는 민족파괴주의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넷째 소위 同化政策과 문화적 침략에 의한 조선 말살전략을 관철시켜 나간 것이다.<sup>14)</sup>

### 나) 식민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일제는 총독부 체제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억압적인 식민지 국가기구를 형성하였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억압적인 국가기구와 또 하나는 식민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이다. 전자는 군대, 헌병경찰기구, 관료행정조직, 사법기관 등이며 후자는 학교

13) 유명익, "조선 총독부 초기의 구조와 기능",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69, pp. 95-107.

14) 이태일, "식민지 통치기구의 정비와 운용",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차기벽 엮음), 서울, 정음사, 1985, pp. 46-77.

와 언론기관 등이다.<sup>15)</sup>

억압적 국가기구의 핵심은 조선군이었다. 1907년 7월 공포된 일본칙령 205「조선주차군사령부조례」에 따라 일본 천황의 직속하에 조선주차사령부를 두고 육군대장을 사령관에 임명 조선내의 육군부대의 통솔과 지휘 출병을 관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의 군대는 조선내 고조되었던 반일의 병투쟁(1907-1910)에 동원되어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였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1909년 9월에서 11월까지 감행한 「남선대토벌작전」으로서 의병활동을 거의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합병이후 의병운동을 거의 소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915년 2개사단 증설안을 마련하여 병력증강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북부의 요충에 북부 수비대를 남부의 요충에 남부수비대를 진해와 영흥만에는 해군기지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군사력을 갖추어 나갔다. 이러한 군사적 물리력의 예비는 이에 지출된 예산 총액이 1억 6백 40만원(1907-1917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입증한다.<sup>16)</sup>

일제의 헌병경찰기구는 1896년 1월 임시헌병대 편제령에서부터 비롯되어 1907년 고문경찰제와 통감부 경찰관제를 통폐합시켜 한일경찰로 일원화시키고 주차헌병을 직속화시킴으로써 완결지었다. 이러한 헌병경찰조직은 합병후 더욱 확대시켜 행정, 사법의 권한은 물론 여러가지 잡무집행 능력까지 갖게됨으로써 통치 전반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었다.<sup>17)</sup> 경찰기구는 그 편제가 독립된 총독의 직속기관이었고, 그 직무를 헌병의 책임자가 총독부 경무총장과 도 경찰부장을 겸임하는 철저한 중앙집권식 체제였다.<sup>18)</sup> 각 지역에는 그 행정단위에 따라 헌병대, 헌병분견소, 헌병과견소, 경찰서,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등을 두었으며, 각 기관에는 헌병과 경찰을 배치하였다.

그들은 첩보 수집, 의병토벌에서 부터 노동자 단속, 농사개량업무에 이르기까지 일반 민중의 생활 전반을 통제, 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 즉결처분권을 비롯한 각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헌병경찰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찰권과 재판권까지 행사하며 조선 민중을 멋대로 유린하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 1918년 9월 기준으로 그들의 규모는 헌병대 1,048개에 8,054명, 경찰관서 738개에 6,287명에 이르렀던 반면, 이들이 조선민중을 구속시킨 수는 1917년 기준 1만 3천명에 이르렀다.<sup>19)</sup>

합병초기 관료행정기구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의 중앙정부 관제를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로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총독부는 13도 12부 317군의 편

15) 조재희, "일제 초기 식민지 국가기구의 형성과 그 성격", 3·1민족해방운동연구(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공편), 청년사, 1989, pp. 77-104.

16) 엇글.

조선총독부 시정년보(1917)는 이 비용이 동기간에 사용된 행정비 총액 1억 2천57만원보다 약간 적은 액수임을 확인해 준다(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시정년보, 1917, p. 12).

17) 이현희, "3·1운동이전 헌병경찰제의 성격",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동아일보사, 1969, pp. 109-120.

18)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서울, 박영사, 1986, pp. 216-223.

19) 엇글, pp. 89-91.

제로 지방행정체제를 구성하고 각각 도지사, 부윤, 군수를 두었다. 이러한 체제개편의 주안점은 최하급 기초행정 단위를 면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친일세력을 기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동과 리 중심의 지역 공동체질서를 파괴하는데 두었다.

도지사에는 6명의 친일 조선인을 등용되었고, 민정과약을 주요 업무로 하였던 도지사 보좌역은 모두 친일 조선인으로 임명하였다. 결국 그들은 고급관리와 중요직책은 일본인으로 충원하였고, 하급 실무관리는 친일적인 조선인으로 고용하는 인사정책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조선인 하급관리는 총독부의 통제하에서 일본인 관리에 비해 훨씬 낮은 봉급을 받으면서 식민지 지배를 일선에서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1914년 地方行政整理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들은 이를 통해 민족내의 친일 관료 집단을 양성하는 재상산구조의 제도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그 결과 면 단위 말단행정기관은 헌병경찰과 마찬가지로 의병을 탄압하고 민중을 억압, 수탈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up>20)</sup>

일본이 조선의 제도와 조선인을 우대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 놓은 총독부 산하에 중추원이라는 기관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 인원은 70명의 인원정도로 구성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친일매판세력만을 모아놓은 일종의 집합소였고, 그 기능 역시 자문을 담당하는 형식적 기능만 가졌다. 그러한 기능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추원은 3·1운동까지 단 한차례도 소집된 적이 없을 뿐더러 그 이후에도 그 기관은 원래의 기능이 아닌 식민통치에 필요한 민속조사 작업등 반민족적 역할을 수행하였다.<sup>21)</sup>

일본의 사법체제는 법원, 검사국, 감옥등으로 분류되는 식민지 체제의 무력집행기구였다. 그것은 식민지 민중을 철저히 탄압하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가능케하는 하나의 통치도구였다. 왜냐하면 조선 민중에 적용되는 법률은 일본의 법률이 아니라 대부분 조선총독의 제령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의 제령에 따라 공포된 법령을 보면 범죄즉결령(1910. 12), 조선교육령(1911. 11),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및 조선태형령, 조선감옥령(1912. 3) 등이었는데,<sup>22)</sup> 이들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악법으로 기본적 인권마저도 무시하는 법률체계였다. 예를 들어 범죄즉결령에는 경찰서장이나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헌병분대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구류, 태형,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3개월 이하의 징역, 100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지방 재판소에 관할되어 있는 사건중에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범죄등에 대하여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sup>23)</sup> 이들 사법기관에 충원된 사람들은 다른 행정조직에 비해 조선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인 분쟁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

20) 김운태, 앞책, p. 212-215.

21) 김운태, 앞책, p. 231.

22) 조재희, 앞글, p. 94.

23)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 p. 49.

였기 때문에 일본지배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sup>24)</sup>

식민지 국가기구의 또 다른 한쪽은 학교, 언론 등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중요기능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일제는 학교기관을 장악하여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보급하는데 반하여 조선의 학교는 민족교육을 통하여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하였다. 그래서 일제는 식민지 노예교육을 강제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는 데, 1906년의 학교폐쇄조치, 1911년의 조선교육령, 1911년 사립학교규칙, 1918년의 서당에 관한 규칙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거점인 사립학교와 서당을 탄압하고 교육내용을 강제하여 사립학교의 수를 격감시켰다. 조선민중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서당을 급격히 증가시켜 민족교육을 시켰다. 그러자 일제는 서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 서당교육의 내용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였다.<sup>25)</sup>

일제의 교육정책은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고 일제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맥락속에서 일본은 문명적인 지배국가로 조선은 미개적인 속국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천황제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식민지 민중을 노예화하려는 것이었다.

일제는 1910년 합방 직전에 집회취재법을 공포하고 재반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치집회와 의사표시의 자유를 금지시켰다. 이로써 조선민중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대변할 단체를 잃어버렸을 뿐더러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다. 언론탄압의 경우도 1907년 이후 부분적으로 신문지법, 출판법을 이용한 제한적 조치를 취하다가 합방과 동시에 어용신문 몇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문의 발행을 금지시키는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한다.<sup>26)</sup> 그래서 조선 민중은 대한매 일신보와 같은 민족지를 잃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타 신문구독에 대한 기본적인 구독권리까지 봉쇄당하게 되었다. 1910년대 일제의 언론정책은 언론매체를 적극 장악하여 지배이데올로기를 홍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적극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의사전달을 차단하는 통제방식을 활용하였다.

한마디로 일제가 총독부 체제를 중심으로 조선에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정치행정적 질서는 식민지적 통치방식의 제도화와 일상화였다.

2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시정년보, 1912, p. 63.

1912년 기준 판검사의 인원은 일본인 215명, 조선인 4명이었다.

25) 조재희, 앞글.

26) 조선총독부 통제년보, 1911, pp. 239-241.

1909년 현재 일본인이 발행하던 신문은 30개사에 달하였다.

### Ⅲ. 삶의 경험과 의식형태

#### 1. 각 계급의 삶의 경험들

1910년 일제의 조선 침략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을 식민지 체제로 전환시키는 무단통치를 감행함으로써 조선인은 민족붕괴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조선인들은 식민지시대로 전환해가는 절망상황을 경험하며 살았던 만큼, 각 계급들이 제국주의 체제에 억압받는 삶의 경험들은 다양하고 그 대응 역시 계급의 상이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었다. 상층계급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다수 흡수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 하층계급인 농민과 노동자들은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저항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여기서는 3·1이전까지 각 계급이 경험하였던 체제와 연관된 의미있는 경험들과 거기에서 생성된 의식형태를 특징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일본의 조선식민지화가 이루어진 만큼, 조선인의 삶은 처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경제구조 재편은 토지강탈로 나타남으로써 농민들은 점점 빈민화되었고 노동자들은 일본자본에 예속되는 노예화되는 삶을 경험하였다. 토지사업은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저당규칙과 1908년 토지가 옥소유권규칙과 국유미간지이용법 공포와 동양척식회사의 설립으로 시작하여 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은 방대한 토지약탈과 지세수탈을 자행하여 일제의 순응세력인 지주계층을 인정해주면서 농민을 빈궁화 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1910년 일본인 지주가 2,254명이었고, 1914-17년까지 땅을 빼앗긴 사람은 36,061명, 토지소유분쟁은 33,937건, 지세의 증가는 1914-17년 사이에 45%가 증가하는 결과 초래되었다. 이결과 1918년 기준으로 3%의 지주가 토지의 50%를 소유하고, 자작농 20%, 자소작농 39%, 소작농 38%로 변하고, 대부분의 농민은 낱팜팔이로 전락해 버린다. 대부분의 농민은 이시기에 화전민, 노동자, 도시빈민, 거지로 전락하거나 생존을 위해 해외로 떠나게 된다.

일본제국주의 토지사업은 일본 자본의 요구에 따라 일본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저미가·저임금으로 해결하는 지주적 농업구조와 정책을 추진하고 농민은 몰락과 희생의 길로 치닫는다.

일제는 1910년 조선을 일본의 상품시장과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로 지정하여 막대한 초과이익의 약탈무역체제를 갖추면서 조선의 민족자본을 억압하면서 조선 공업구조를 재편한다. 1910년의 회사령이 공포하면서 회사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바꾸어 놓고 일본자본가들의 회사설립은 권장한다. 이러한 결과 1911-17년까지 전체자본총액에서 일본은 31.8%에서 79.6%로 조선은 17.2%에서 12.3%로 떨어진다. 일제는 1915년 조선광업령, 1911년 어업령을 공포등으

로 조선경제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지배는 공고히 다져지고 민족경제의 위축은 더욱 심화되어 조선은 일본독점자본을 위한 원료공급지, 상품판매시장,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지로 변하고 조선 민중은 식민지적 억압과 수탈을 당한다.

## 2. 각 계급의 운동형태

3·1이전까지의 독립운동의 형태는 대략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상층계층의 민족주의자들로서 무장항일투쟁을 표방한 세력이다. 이 유형은 의병전쟁과 맥을 같이 하는 세력으로서 국내의 소규모 유격전을 전개하다 1909년의 초토화작전과 대토벌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만주·연해주로 기지를 옮겨 무장활동을 벌이거나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단체들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세력은 군사금 확보, 헌병, 경찰기관의 기습공격, 군사교육과 계몽교육을 전개한다. 이 세력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국내의 기반을 상실하고 퇴조한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한 세력이다. 위정척사의 맥을 잇는 유생들에서부터 진보적 유생들, 근대적 지식인, 종교계인사, 청년학생, 중소상공인등의 집단으로 다양한 정치의식을 표출한다. 이 세력의 활동 역시 군사금모집, 친일파와 악질지주처단, 독립군양성, 테러활동, 격문배포 및 반일교육과 선전활동등 다양하였다.

세째, 무장투쟁이나 반일활동 보다는 민족교육운동과 문화운동등 애국계몽운동에 주력한 국내외의 지식인 집단이다. 신채호, 박은식이 이끄는 신간회등이 대표적인 집단으로 민족교육운동을 사립학교, 서당, 야학을 통하여 민족정신의 진작을 도모하였고, 문화운동은 학술연구문제창작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의 수호와 보급을 전개하여 민족의식의 확립과 자주독립의식을 고취시켜 나갔다.

네째, 3·1운동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민중운동으로서 노동자와 농민들 세력이다. 노동자의 경우 일제에 저항하는 노동쟁의등이 이 경우인데 1912-17년 까지 매년 10건정도 발생하던 것이 1918년 50건, 1919년 84건으로 급증해갔다. 참가인원 역시 점점 늘어나 1918년에는 6,105명 1919년에는 8,283여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임금문제와 대우개선을 내거는데서 동맹파업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오노다 시멘트 공장이나 고성어업노동자들의 경우처럼 폭동으로 발전해 나가기까지 하였다. 농민의 경우 일제의 토지조사사업등으로 침체에 빠졌으나 점차 대응력을 회복해 나간다. 1918년의 청원군 마장면의 면사무소 습격, 남원군 농민의 면사무소 습격, 문천군 농민의 헌병대 본전소 습격, 제주도 농민의 무장봉기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은 체계적이나 조직적이지는 못하였고 민중운동의 한 흐름을 이루었다.

1910년의 한일합방이란 민족적 위기는 상호 배제적이거나 비협적이었던 각 계급의 운동들이 일정한 변용을 거치면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sup>27)</sup> 각 계급들

27) 바로 이전의 시기인 1896년에서 1905년 까지는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환기적인 의미를 가

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민족해방의식으로 결합된 것이 3·1민족해방운동이었다. 아울러 3·1민족해방운동으로 결집된 해방의식은 각 계급들이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저항의 상이함을 표출하면서 각계급별로 각각의 세력화를 모색해 나간다.

## IV. 3·1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내용

### 1. 3·1운동의 전개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2개월간 거족적으로 전개한 최대의 민족해방운동이었다. 이 3·1운동이 처음에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및 학생세력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다가 마침내 천도교에 의하여 일원화되어 종교계 및 학생세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할 수 있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돌아 가셨다. 총독부는 뇌출혈이라 발표하였으나 항간에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반일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유학생들이 주도하여 발표한 2·8독립선언서는 3·1운동을 급속도로 추진시키는 데 커다란 자극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민족대표 33인은 1월 말부터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운동 3원칙을 설정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청년, 학생조직과 종교조직을 통하여 운동의 준비를 진행시키고, 그 거사일을 3월 1일 고종국장일을 택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평화적인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다.<sup>28)</sup>

1931년 3월 1일 2만명의 민중이 파고다공원에 운집한 가운데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독립이 선언되었다. 고종장례식에 참석하러 올라온 지방민을 포함하여 수십만 조선민중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곳곳에는 태극기, 선언서, 신문, 전단이 물결을 이루어 朴殷植은 「마치 영상회상에 하늘의 꽃이 비오듯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如靈山會之天花雨上)고 기록하였다. 같은 날 평양·남포·

졌었는데, 대중들이 이 시기에 세가지의 주요한 운동경험을 공유하면서 1910년대의 투쟁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독립협회와 만민회의 참여경험인데, 대중들이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체제에 저항하고 체제에 대한 대안체제의 주체로의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둘은 대중운동이 의병운동에의 참여경험인데, 대중들을 이를 통하여 식민지화의 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속에서 기본적으로 민족국가의 형성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넓혀나간다. 셋은 노동자, 농민 중심의 민중운동에의 참여경험인데, 그들은 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운동에의 참여를 하였지만 경험을 해나갈수록 민중운동의 주력을 형성하면서 변혁의 주체로 성숙해나갔다. (이정식, 《한발출판부 편집부역》, 한국민족주의의 정치학, 한발출판사, 1982, pp. 95-97., 정창렬, “한말 의병전쟁의 정치·경제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강만길, 송진호편), 한국민족주의론 I: 역사속의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pp. 62-68., 김도형, “한말 의병전쟁의 민중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3: 민중적 민주주의 (박현채, 정창렬 편), 창작과 비평사(1985, pp. 128-169.)

28) 신석호, “3·1운동의 전개”,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서울, 동아일보사, 1969, pp. 153-174.

안주·선천·의주·경주·원산 등에서도 대회와 시위를 일어났다.

이 운동은 3월 상순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나갔다. 3월 상순에는 기독교와 천도교의 지도하에 경기, 황해도 등과 이북지역에서 3월중순이후에 이르러서는 남부지방이 일어난 전민족적 독립운동이 되었다.

운동의 공간적 확산과 더불어 참가계층의 폭도 광범위하게 다원화 되었다. 학생, 교사, 하급종교자, 농민, 노동자, 양반유생 등 민족구성원 대다수가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운동을 조직 주도하였다.

3·1운동의 전개과정을 (1) 주도세력의 분포 (2) 참가인원과 공간적 확대 (3) 투쟁양상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민족대표 주도의 조직단계와 민중주도의 민중운동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족대표 주도의 조직단계에서 그들이 수행한 역할은 운동의 계획, 원칙의 정립, 자금의 공급, 독립선언서의 작성, 배포 및 회합등이었다. 그들이 수행한 역할은 3·1운동을 점화하는 기폭제적 역할이었다. 그들은 독립선언 의식을 끝내고 전원 연행됨으로써 조직단계의 역할은 끝나고, 3월 1일 오후 2시부터 전개된 자발적인 민중운동단계에서는 그들의 역할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sup>30)</sup>

3·1운동은 독립선언과 동시에 민중운동으로 발전하였고, 민중운동의 차원에서 참가인원과 투쟁양상을 고려해 볼때 대략 3단계로 전개되었다. 운동발생한 장소의 수와 참가인원을 검토할 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는 1919년 3월 1일 부터 3월 19일 까지로 216개소에서 123,347명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중기는 3·20일 부터 4월 9일까지로 495개소에서 432,921명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후기는 4·10일 부터 4월 30일까지로 65개소에서 204,803명이 참가하였다.<sup>31)</sup>

운동이 확산될 수록 투쟁양상도 변화하였는 데, 첫째, 계급, 계층간, 종교단체간의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둘째, 운동에서 시위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위를 조직 준비하는 결사조직들이 결성되어 가동되었다. 세계, 운동이 점차 지역별로, 생활권 중심으로 조직화됨으로써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연대투쟁의 형태로 발전되었다.<sup>32)</sup>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해 3월에서 5월까지 전국 210개 지역에서 1542회의 만세시위가 발생

29)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1920, 상해, p. 67.

30)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율유문화사, 1985, pp. 291-385. 여기서 민족대표 33인과 민중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3월 1일 이전을 초기조직단계, 그 이후를 민중운동단계로 나누고 있다.

31)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0, pp. 295-330. 여기서의 운동발생지역수와 참가인원은 조선소요사건 개람표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32) 정연태, 이지원, 이윤상,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3·1민족해방운동연구(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음), 서울, 청년사, pp. 229-257.

하였고, 투쟁의 주류는 노동자의 파업, 사무원의 태업, 학생의 동맹휴교, 상안의 철회 등 평화적인 방식이었다.

운동이 확산될수록 운동의 주력은 일제의 지배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의 박탈과 사전저지의 탄압을 돌파하며 장날을 택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격문·봉화등의 방법,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우체국의 습격, 지적부·호적부의 소각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민족자결의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자주독립의식과 민중생존의 변혁의식으로 투쟁을 이끌어 나갔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봉건투쟁을 결합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제 3·1운동이 형성해낸 대안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 1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2. 지도세력의 해방운동내용

조동걸의 4개지역(서월, 동경, 장춘, 길림)의 3·1독립선언서 분석은 지역적 차이에 따른 투쟁양상의 성격을 밝혀주고 있다. 그가 분석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에서 발표한 선언의 내용은 모두가 독립선언을 표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독립선언의 내용을 갖는 데, 동경 유학생만은 獨立期成을 선포하면서 민족자결의 절차로서 민족자주대회를 요구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4개 지역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선언하였으면서도 장춘과 길림의 경우는 강경하고 전투적인 반면 서울과 동경의 경우는 온건하고 유순하다. 전자는 전투적 계몽주의적 입장과 의병 또는 독립군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무장투쟁을 전개한 지역이었다면 후자는 온건한 계몽주의 입장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경과 서울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동경의 것이 서울의 것보다 강경한 배경에는 학생세력의 이상주의적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계몽주의적 온건론은 무정항주의적 입장이라기 보다는 인도주의적 정향의 전통(특히 공약3장의 행동강령)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족운동이 발전되었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온건론과 강경론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연대와 결합을 이루어 낸다. 양자의 결합과 분화가 시민적 민족주의와 민중민족주의의 발전과 연관된다.

둘째 선언서들의 내용들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사회주의 수용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은 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주의운동의 확산을 시사한 것으로써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셋째 선언서가 공통적으로 인도주의를 지향함으로써 한민족의 대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양평화론과 진화론적 가치론과 같은 패배주의적 논리가 대중들에게 배척받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정의와 인도주의의 결합된 정신이 3·1해방운동의 근원

점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3·1해방운동을 기점으로 시민민주주의 세력이 자기반성을 거쳐 민중의 논리를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민주주의의 형성은 이전의 의병전쟁과 민중논리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계 선언서의 내용과 종교적 관계를 검토해 볼 때, 종교의 차이보다는 민족문제에의 대응을 선결과제로 인식함으로써 민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3·1해방운동은 민족문제가 종교보다는 중요한 상위개념으로 정착시키는 인식의 선택을 남겼다는 점이다.<sup>33)</sup>

이렇듯, '민족대표'로 지칭되는 부르조아 지도세력은 3·1해방운동의 발발계기를 마련하고 여러 세력의 결합을 이끌어내 민족역량을 결집시켜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지도세력은 3·1이후 지도역량의 한계와 계급적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한계성을 드러내었다. 지도세력의 대다수가 무정향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세력으로 주저않음으로써 해방투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고, 소수 집단만이 비타협적인 해방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3. 민중세력의 해방운동내용

비타협주의적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세력이 노동자, 농민운동과 동맹관계를 맺고 험난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가 있었다. 이러한 동맹세력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려는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그들은 민족자본가, 지식인, 청년, 학생, 소시민 등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하면서 민중민족세력을 형성하였다. 삼일해방운동 이후 민중세력의 형성은 고유한 영역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계급들의 연합체적인 특징을 지녔다. 즉, 노동자세력이나 농민세력들도 자체 세력화를 이루어내면서 일상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정도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세력이 민족문제에의 대응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연합세력 구축이 가능하였던 것이다.<sup>34)</sup>

지식인과 청년, 학생세력은 타협주의적 입장의 지도세력을 배격하면서 다양한 선전·선동작업을 전개하면서 운동을 조직하고 대중을 견인해 냄으로써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냈다. 그들은 민중과 고통의 삶을 같이 하면서 민중역량을 결집해냄으로써 민중속에서 민중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세력은 현실의 중심에 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중·민족문제의 최전선을 지키는 역사의 선도대 위치를 차지해 나갔다.

33) 조동걸, "3·1운동의 이념과 사상", 3·1운동과 민족통일: 3·1운동 70주년 기념심포지움, (서울, 동아일보사, 1989), pp. 11-43.

34) 이윤상, 이지연, 정연태, 윗글, pp. 229-257.

농민·노동자·소부르조아 계급들의 민중·민족세력은 투쟁의 초기단계부터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직접 식민지 상황에 최대의 피해와 희생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세력은 3·1운동 초기부터 합법적인 평화투쟁과 비합법적인 폭력투쟁을 결합시키는 저항운동을 전개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에 맞섰다. 그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투쟁에 맞서는 정당한 투쟁방법은 합법투쟁과 폭력투쟁이 결합된 운동이라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제의 조선합병과 무단 강권지배 자체가 폭력적인 지배였던 만큼 평화적인 투쟁만으로는 일제에 대항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민지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몇가지 기준을 갖고 평가되는바, 첫째 전체 민족해방운동에 부합되는 투쟁인가의 문제, 둘째 제국주의 세력의 구조적인 물리력과 폭력성의 문제, 세계 식민지 민중의 폭력사용이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문제가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3·1해방투쟁은 합법적인 평화투쟁의 원칙속에서 방어적인 무장투쟁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를 획득하였음을 보여준다.

4월에 접어들면서 민중·민족세력은 다른 세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전개를 고려해 볼 때 그들은 독자세력으로서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어 민족해방운동의 최전선을 담당할 정도로 독자적인 해방을 형성하여 나갔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3·1해방운동은 여러 계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급의 운동을 결합시킨 시발점이었고, 그 시발의 근원에는 공유된 해방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방의식의 공유는 민족 구성원 전체가 민족붕괴의 처절한 상황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계급·이념·종교의 차이등을 뛰어넘는 민족해방의 대응을 가능케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해방의식은 다양한 의식이 결합된 형태를 갖는데, 인간의 해방의식은 민중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해방의식, 계급적 자각에 의한 계급의식, 민족의 붕괴를 경험한 민중이 새로운 민족국가의 염원으로 결합된 민족의식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되면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였다. 민중세력을 주체로 한 위와같은 의식의 체계가 현대적인 의미의 민중의식과 민중문화의 형태로 성숙된다. 다시 말하면 민중의 해방의식은 민족붕괴의 절망적인 상황에의 경험을 겪으면서 인간해방, 사회적 구속의 해방, 제국주의의 세력으로부터의 민족해방의 시대과제에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생성되었고, 20년대의 투쟁을 거치면서 보다 명백한 내용을 갖추면서 민중의식과 민중문화로 성숙되어 나갔다.<sup>35)</sup>

35) 정창렬, 앞글, p. 30.

〈표 1〉 식민지 상황과 삼일해방운동의 내용들

	식민지 상황	민족해방의 대안
1. 해방의 출발점	각 계급의 삶의 피해·억압 경험과 민족의식	민족해방 운동의 전개
2. 인식론	제국주의	자유주의·민족주의 사회주의의 요소
3. 각 계급의 해방운동의 내용 1) 타협적 민족주의 2) 비타협적 민족주의 3) 민족적 사회주의 4) 계급적 사회주의	식민지 강권통치  1)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 2) 자본주의 예측경제 3) 문화적 식민정책	1) 일본 의존적 자치 2) 민족독립정부의 수립  3) 사회주의 민족정부 4) 사회주의 민중정부
4. 해방의 방법론	비폭력, 폭력 또는 양자 결합의 투쟁	인간, 계급, 민족의 해방론
5. 해방의식과 대안문화	제국주의의 식민의과 식민문화	민중의식과 민중문화 시민의식과 시민문화 계급의식과 사회주의문화

## V. 해방사상의 논리와 체제에 대한 대안적 의미

### 1. 해방사상의 논리

3·1운동은 민족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민족이 전개한 민족해방운동이었다. 3·1운동을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파악할 때, 그것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민족 주체적으로 수행한 민중의 해방운동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3·1운동을 33인 민족대표 주도의 계획단계와 대중화단계로 나누어 파악할 때, 3·1해방사상의 근원을 두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민족 33인과 연관된 사상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이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때, 지도적 위치를 담당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세력은 그만큼의 공로를 차지한다. 그들이 종교적 평화주의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소극적 계획과 비폭력 투쟁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때문에 투항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종교가 1910년 이전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던 선교의 논리를 극복하고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는 담당자로 방향을 잡아나갔다는 데 있다. 1910년 까지 종교계는 제국주의 침략에 무력함을 드러내는 데, 불교의 경우 일본제국주의 불교를 선교하다가 흡수 통합되었고, 기독교 경우 선교사들의 친일적 태도를 보여 제국주의 논리를 펼쳤으며, 천도교의 경우 노일전쟁때 일본을 지원한 사례들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1910년을 넘어서면서 종교계는 민족문제에 접근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한용운의 불교유신운동, 1913년의 천도교구국단 결성운동, 1915년 민족교회의 방향모색운동들이 그것이다.<sup>36)</sup>

첫째 지도계층들이 식민시대의 혼미한 삶을 극복하려는 정신적 구심점을 찾으려 하였다는데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다.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개화기에 서세동점과 일본침략에 맞서서 근대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주의의 경험에서 비롯된 실패와 시행착오의 역사가 깔려있다. 우선 개화기에 척사위정사상, 동학사상, 개화사상 등 세갈래로 사상적 뿌리와 지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민족통합의 이데올로기를 생성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대적인 의미의 민권사상으로 까지 발전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상적 취약성 때문에 지도세력은 만민공동회의 경험, 의병전쟁의 투쟁을 결합시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10년 이후 지도세력은 붕괴되고 제국주의에 흡수되기 까지 한다. 그러나 지도세력, 특히 종교세력은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려는 무기력한 종교주의의 허점을 극복하고 토착화된 민족종교의 길을 지향함으로써 평화적인 민족주의의 기틀을 정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도세력은 3·1운동을 통하여 소극적으로는 반제국주의의 목표를, 적극적으로는 반봉건주의의 목표에 합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도계층들은 3·1운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개혁의 경험을 반영시키려 하였다. 조선왕조 시대를 볼 때 지도세력은 전제왕권제의 영향 때문에 민주적인 개혁논리를 생성하지도 못하였고 발전시키지도 못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일반백성이 삶속에서 생성된 민주적인 요소 역시 수렴해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지도세력은 갑신정변, 갑오경장, 독립협회 운동등을 통하여 입헌군주제 정부 수립을 시도함으로써 전제왕정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권을 신장하려는 개혁논리를 마련해 나갔다. 아울러 한말의 新民會 운동을 주도한 일부 지도세력 역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개혁논리를 제시하였다.

세째 지도계층들은 3·1운동을 통하여 범 세계적인 역사의식과 국제적 연대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계기를 열었다는 점이다. 지도세력이 중화적 세계질서에 안주해온 은둔국의 철학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역사인식을 결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조선왕조시대의 현실이었다. 조선왕조시대 개화사상가들이 서구 및 일본과 문물교류를 가짐으로써 국제적 역사인식을 넓힌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연대와 이해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도세력은 3·1운

36) 조동걸, "3·1운동의 민중사적 의미", 신동아 306호, 1985(3월호), pp. 408-417.

동을 예비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에 일정하게 대응하는 역사인식을 갖는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족자결주의의 수용이라든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급진적인 사상의 수용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3·1운동 당시 상해임시정부가 파리강화회를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벌인 점은 국제정치적 전략을 동원한 정치운동의 의미를 갖는다.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동경 유학생 중심의 2·8독립선언, 중국, 만주, 시베리아, 북간도, 미국 등지에서서의 만세시위 등 역시 국제적인 연대의식을 생성한 정치투쟁으로 인식될 수 있다.<sup>37)</sup>

지도세력이 3·1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위와같은 긍정적 공적 못지않게 부정적 측면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도세력은 3·1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비타협 민족주의자와 민족주의자로 뚜렷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3·1운동 이전시기에 전개된 여러가지 개혁운동과 의병운동에서도 부르조아적 성장의 미진과 지주적 속성 때문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도세력이 이시기에 보였던 자체의 한계, 즉 조직운동역량의 미숙, 외세의존적이거나 북고주의적인 지향성, 민중의 운동역량에 대한 과소평가등으로 민중적 지도력을 건인해 낼 수 없었다.

아울러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시민계급이 성장하기 보다는 몰락하였기 때문에 부르조아 중심의 지도세력이 3·1운동을 지도해 낼 수 없었다. 이는 시민계급으로 성장하던 개화파 인사들이 친일파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때문에 3·1운동의 초기단계를 계획한 지도세력은 종교세력이 될 수 밖에 없었고, 3·1운동은 민중주도의 운동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 3·1운동 전개과정에서 민중세력의 성장은 3·1운동이후 지도세력의 사상과 이념을 일정하게 재구성하게 하였는데, 신채호와 박은식의 사상에서의 변화, 사회주의 사상과 단체의 결성, 무장투쟁세력의 성장들이 그것들이다.<sup>38)</sup> 이들의 한계점을 대략 살펴보면

첫째, 지도세력이 독립선언을 하는 예비적 역할은 하였지만 전민족을 조직화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종교계 지도자의 경우 지식인이나 노동자·농민 모두 분출된 역량을 성숙시키는 지도력을 가지지 못했다.

둘째, 민족지도자가 선언적 원칙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목표와 전술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중들의 항일투쟁을 결함·승화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제국주의의 질서에 저항은 하였으나 제국주의의 극복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민족독립에 대한 청원주의적 방식등 소극적인 접근으로 제국주의적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이를 입증한다.<sup>39)</sup>

37) 유명익, "3·1운동의 현대사적 의의" 경경문화(253호), 1986(3월호), pp. 56-61.

38) 지수걸,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교훈", 3·1민족해방운동 연구(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편), 서울 청년사, 1989, pp. 27-33.

39)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의 전개과정", 한국 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서울, 한길사, 1986, pp. 71-110.

## 2.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 시민민주주의의 형성

3·1민족해방운동은 일제와 민족 사이에 내재하는 민족적·사회적 모순에 대한 민족적 항전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른 민족독립의 혁명적 열기의 영향을 흡수하면서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거족적 반일항전으로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위에서 논의하였다. 민족해방운동으로 결집된 각계급운동은 크게 두가지의 민족문제에 대한 대안을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상층부 민족주의자들의 대안형성의 근원으로 33인의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의 정신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 공약삼장

一. 금일 오인의 此舉는 정의·인도·생존·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逸走하지 말라.

一.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철회 발표하라.

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위의 공약삼장은

첫째, 삶의 영역에서 민족을 구하는 이 운동의 정신은 자주독립의 전통에 입각한 정의와 인도주의의 운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둘째, 의식의 영역에서 한민족의 민족적 저항의식과 민주의식을 정당하게 행사할것을 말하고 있으며,

셋째, 대안의 영역에서 우리 민족의 정의와 인도주의의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들의 민족의 민주적인 저항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체제적 대안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삼장의 정신은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체제적 대안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러한 대안은 3·1운동 초기에 수립되었던 한성정부, 대한민국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발전하였는데, 이 중 국민의 항쟁의 경험을 제대로 담아나간 것이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발표한 한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에는 10개항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민주공화제의 채택(1조) (2) 권력구조의 표명(2조) (3) 인민의 평등권(3조) (4) 인민의 자유권(4조) (5) 인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5조) (6) 인민의 의무(6조) (7) 국제연맹 가입의 원칙(7조) (8) 황실의 우대 및 계승(8조) (9) 생명형·신체형·공창제의 폐지(9조) (10) 독립후의 국회소집(10조)이며 그 정강은 다음과 같다.

1. 민족평등·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체의지함.
5. 절대독립을 꾀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達越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함.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구성이 3·1운동의 민족적 투쟁의 염원을 일정정도 반영한 민주정부였다는 점에서 3·1민주행정사상의 근원을 이루게 된다.

첫째, 임시정부의 수립은 1919년 4월 13도 대표가 비밀회의를 갖고 세운 한성정부와 시베리아 망지사들이 설립한 대한민국 의회와 상해임시정부등 독자적인 3개의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독립운동의 난립문제가 제기되어 통합하여야 된다는 민족적 요구를 수렴하는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3개정부 대표들은 여러차례의 대표자회의를 거쳐 합의문을 얻어 13도의 국내대표가 세운 한성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기로 결성하고 시베리아와 상해의 정부를 해체키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들 대표자들은 독립운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곳을 상해로 인식하여 그 소재지를 상해에 두고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하여 1919년 9월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의 민족투쟁을 수렴하였고 그 탄생과정의 합의적이었다는데 있다.

둘째, 임시정부가 채택한 사상적 내용들이 민주제, 공화제, 대의제 등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원리의 도입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임시정부의 근간조직의 국무원인데, 그 구성은 국무총리, 6부 총장과 차장 각 1명으로 13명이었다. 이들의 선출과정 역시 민주적이었는데, 선출은 임시의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국무총리 선거시 3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행하여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시켰으며, 각부의 경우 총장은 3명의 후보, 차장은 2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투표로 선출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3·1민족해방운동이 생성한 첫번째의 대안은 상층계급중심으로 이루어진 임시정부의 구성이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구성의 운동의 대중화·일원화·비폭력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대중을 결집시키고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이룬 상층계급의 투쟁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층계급의 민족의식을 반영시킴으로서 일반민중의 분노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장기적인 항쟁대열로 이끌어 내는 데까지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점 역시

갖는다.

또 하나의 체제적 대안의 흐름은 민중민주주의의 구상으로 발전 분화 되어 나간다. 3·1민중해방운동은 모든 계급의 운동을 결합시켜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으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봉착하면서 역시 실패하게 되면서 운동의 흐름 역시 분화의 조짐을 보인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3·1운동의 이념들은 각 계급의 참여 만큼이나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으면서도, 인권사상, 자유사상, 사회주의 사상 등등이 계몽적인 성격을 띄었다. 아울러 1920년대 초기 까지는 친일 지향적인 세력과 비타협적인 민족 세력이 사상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채, 하나의 사회운동의 틀 속에서 움직여나갔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이었다. 조선인 기업의 역량을 키워나가자는 취지의 “물산장려운동”은 그 취지는 훌륭하였지만 민족해방운동과의 연결된 운동으로서의 자리를 못잡고 막연히 조선인 기업만을 위한다는 차원으로서 전개 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고, 민족교육의 건설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민립대학의 설립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교육의 운영과 전망을 못가짐으로써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그친다.

### 3. 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 : 민중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상층계급이 주도한 사회운동의 민족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운동의 이광수의 ‘민족개조론(1922)’이 발표되고 이것이 제한적 민족자치론으로 발전되면서 상층계급이 친일적인 방향으로 기울어 가자 상층부가 분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상층계급의 분화를 알리는 것이 의열단 이름으로 발표된 신채호의 <조선 혁명의 선언>이었는데, 이의 내용을 살펴보자.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처절장절한 기록이되리라. 그러나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흑암한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명한 활로니 우리 조선민족은 그 참절·장절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재 폭력-암살, 파괴, 폭동-이 목적물을 대상 열거하건대

1. 조선총독 및 각 관공리
2. 일본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로·매국노
4. 적의 일체 시설물...혁명의 길은 파괴로부터 개척할지니라...제일은 이족통치를 파괴함이다...제2는 특권계급을 파괴하고자 함이다...제3은 경제약탈제도를 파괴하자 함이다...제4는 사회적 불균형을 파괴하자함이다...제5는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하자함이다...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이오 둘이 아닌줄 알진데, 민중적 파괴 앞에는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줄 알진데,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건설의 쟁애년 강도 일본세력을 파괴할것뿐인 줄을 알진데,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내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될 '외나무다리 위'에 선줄을 알진데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파괴의 길로 나아갈 지니라.

민중은 우리운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속애가서 민중과 악수하여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서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압박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3·1운동이 형성한 또 하나의 체계적 대안으로서의 민중민주주의의 맹아를 만나게 된다. 이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투쟁의 한대열을 형성하며 남는다. 이들이 사상적 근거가 명백히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지만, 비타협적인 투쟁을 지향하였기때문에 사회주의자들과 해방투쟁의 공동전선의 구축을 위해 서로의 합일점을 찾아나가게 되며 1927년에는 신간회라는 조직으로 합류하게 된다.

3·1민족해방운동을 계기로 민중의 정치의식은 높아져나갔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이 광범위하게 발전해나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민중의 성장을 흡인해 내야할 상층계급은 친일 지향적인 민족개량론으로 기울어 나가면서 지도력을 상실해 나가자 사회주의 사상이 조선사회의 상황적 유인력과 결부되면서 학생·청년세력들이 또 다른 이정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운동의 지도력을 상실한 상층계급의 민족주의 사상과 경쟁하면서 여러사상단체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해가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세력은 사상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비타협적인 민족세력과 공동전선을 구축해나가고 나아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아가며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립으로 연결되어 나간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3·1운동이 낳진 또 하나의 대안이 민중 민주주의 구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그 구상의 윤곽을 살피는 정도로 한정하고자 한다.

3·1운동 이후 가장 두드러진것이 노동과 농민운동의 급격한 발전이었다. 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지식인과 청년층이 사회주의 사상운동과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노동단체 조직운동이 전개된다. 1924년 4월 18일 조선노동총연맹이 결성되어 181개조직이 참여하고 대표 295명이 모여 창립대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채택된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오인은 무산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오인은 단결의 위력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데까지 철저히 자본계급과 투쟁한다.
3. 오인은 노동계급의 현생활에 비추어 부리증진 및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

우리는 위에서 이렇듯 3·1운동을 제기로 또하나의 대안이 모색되어 나가고 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한 민중민주주의의 맥락이 어떠한가를 보자.

첫째, 그것은 민족해방투쟁의 공동전선을 모색해 나가면서 조선공산당의 결성으로 발전하면서, 민중들이 해방투쟁과 결합을 시도해 나가는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지향하는바는 민중주체의 신사회건설로 무산계급의 해방을 목표로 잡고 있다.

둘째, 그것이 지니는 의식은 무산계급의 사회주의 의식과 무장항일투쟁의 민족의식의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대안의 창출은 파업과 소작쟁의 투쟁을 통하여 민중주체의 민중민주주의의 대안을 잉태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 4. 체제에 대한 대안들의 함축

3·1운동은 민족독립을 쟁취하지 못하였으나 전민족의 독립의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민족해방운동의 지평을 열었을 뿐더러 한국민족사에 사상적, 실천적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데 있다.

첫째 이 운동은 전민족이 제충적 이해를 초월하여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둘째, 이 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무단정치와 강권행정체제를 변화시키고 민족운동의 사상적 실천적 원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이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이 민중에게 민족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을 뿐더러 민중주체의 민족해방투쟁의 계기를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민족지도자 세력이 민중의 지지와 참여를 수용하지 못할 때 그 지도력과 결집력은 의미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넷째, 민족해방운동이 비폭력적인 원칙과 무장투쟁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독립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제 제국주의 사상과 맞서 싸운 3·1운동이 형성한 체제에 대한들을 식민지행정체제와 비교해봄으로서 표14와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듯하다.

〈표 2〉제국주의 식민행정사상과 3·1민주행정사상의 비교

사 상 운 동	제국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1. 3·1민족해방	총독부의 설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치 (1) 한성정부 (2) 대한민국의회 (3) 대한민국임시정부

사 상 운 동	제국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2. 독립 운동의 전개	식민통치기구의 수립	항일무장투쟁의 발전 (1) 조선공산당의 결성 (2)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농민 운동과의 결합
3. 지향세계	제국주의 세계	(1) 민족 독립과 민주 사회의 건설 (2) 민족 독립과 민중 민주주의의 건설

## VI. 삼일해방운동의 행정적 함축

삼일민족해방사상은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민족해방과 봉건적인 왕권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사상의 현실적, 이념적 근원을 마련하였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삼일해방사상의 정치행정적 함의는 각 계급이 참여의 민족독립운동을 통해 민주정부의 구성을 추진하였다는 데 있다. 그것이 갖는 실천논리는 해방운동이후 지속된 민중민주주의의 저항운동의 함의속에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 1. 삼일민족해방사상의 정치행정적 함의

필자는 통합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삼일해방사상에 대한 앞의 논의를 집약하여 표17과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도 제 3장의 결론에서 조광조 사상에 적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해석의 핵심은 특정한 인물이 삶과 의식과 대안 영역에서 상호 모순되지 않는 사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들이 경험한 삶의 경험과 의식의 형태, 그리고 체제에 대한 대안형성이 내포하는 사상적 의미에 집중된다. 이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삼일해방사상이 갖는 정치행정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명제화시킨다.

(1) 삼일해방사상이 모색한 방법의 발전은 삶의 영역에서 명제 1을 구성한다.

명제 1 : 삶의 영역에서의 민권쟁취의 탐구가 삼일해방사상의 근원이다.

각 계급은 다음의 삶의 과정을 거쳐 명제 1을 구성하였다. 각 계급은 (1) 삶의 영역에서 처참한 식민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민권의 의미를 탐구해 나가고 (2) 현실적으로 민권사상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3) 식민지 상황에 구체적으로 저항하는 (4) 민족해방운동의 세력화를 이루어 나간

〈표 3〉삼일해방사상의 정치행정적 함의<sup>40)</sup>

형성과정 실천논리	방법의 발견	목표의 정립	내용의 구체화	주체의 형성
삶의 영역 : 명제 10	삶의 의미탐구 (민권의 의미) (1)	민권사상의 현 실적 적용 (2)	식민상황에 구 체적 저항 (3)	민족해방세력의 결집 (4)
의식의 영역 : 명제 11	민권 의식과 해방 의식의 탐구 (5)	민족해방사 상 의 구현 (6)	억압받는 인간 과 민족의 해방 (7)	제국주의와 식 민체제에 저항 과 대결 (8)
대안의 영역 : 명제 12	민권주의와 독 립운동의 결합 (무장투쟁과 평 화투쟁의 결합) (9)	국민주체의 민 주주의 형성(임 시정부의 형성) (10)	민주행정의 구 상 (11)	시민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세력 형성(현대 적 민주사상) (12)

다.

삶의 영역에서의 명제 1은 체제가 민족의 존립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식민지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하늘에서 내렸다는 민권의식에의 탐구로 나타난다. 민권의식은 각 계급이 식민지 상황에 구체적인 저항운동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한편 해방운동과 결합되면서 더욱 성숙하였다.

(2) 삼일해방사상이 정립한 방법의 발견은 의식의 영역에서 명제 2를 구성한다.

명제 2: 의식의 영역에서 민권의식과 해방의식의 형성이 절망적인 현실상황(제국주의와 반봉건체제)를 극복하는 길이다.

각 계급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의식을 형성하였다. 여러 계급의 국민들은 민권의식과 해방의식을 탐구하여 그들간의 상호주관성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5) 민족해방을 위한 사상형성의 목표를 세우고 (6) 압제받는 인민과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는다. (7) 이러한 역사의식이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의식으로 승화되어 민족해방투쟁을 가능케 하였다(8).

의식의 영역에서의 명제 그는 각 계급이 억압과 저항의 경험을 거치면서 권력순환적인 의미의 민권의식과 해방의식에 관한 상호주관적인 의미를 공유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식은 그냥 주

40) 필자는 삼일해방사상의 핵심은 각 계급이 주체가 되는 민권사상의 의미 탐구와 민족독립운동에의 참여경험이라고 본다. 때문에 삼일해방사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경험들을 승화시키는 방법의 발견에서 찾는다. 여기서 해방의식은 인간이 봉건체제에서 해방되는 의미와 민족이 제국주의에서 해방되는 의미를 내포한다.

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식민지상황에서의 삶의 고통과 이를 극복하려는 저항의 결과 생겨난 것이었다. 때문에 각 계급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와 대항하면서 민주적인 민권의식과 민중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삼일해방사상이 정립한 방법의 발견은 대안의 영역에서 명제 3을 구성한다.

명제 3: 대안의 영역에서 민권의식과 3·1해방운동을 반영한 민주주의가 인간해방과 민족해방을 이루는 민주적인 정부의 원리이다.

대안의 영역에서 명제 3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데, (9) 각 계급은 삶의 영역에서의 합법, 비합법 해방투쟁을 반영한 민주주의를 탐구하여 (10) 민권의식과 해방의식을 반영한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무장투쟁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립하고 (11) 민권의식과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반영한 민주행정 사상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삼권분립의 정립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함으로써 (12) 저항과 희생을 동반한 해방운동은 현대의 시민 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를 받쳐주는 사상적 출발점이 되었다.

대안의 영역에서의 방법의 발견은 제국주의의 식민체제에 압제와 저항을 경험한 민중들이 3·1해방운동을 통하여 민권의식을 반영한 민주주의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국민 주체의 시민민주주의와 민중 주체의 민중민주주의의 근원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권력순환적인 민주사상의 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민족이 멸망한 상황속에서 민족을 구하려는 여러 계급의 저항운동과 희생의 결과로서 생성되었다. 때문에 국민들이 해방운동을 통하여 지향한 세계는 민족의 해방과 인간의 해방이었다.

## 2. 삼일해방운동의 현재적 함축

필자는 운동과 행정이 점축한다는 관점에서 삼일해방운동의 함축을 해석해 보았다. 그것이 각 계급의 삶의 경험을 근거로 의식과 체제에 대한 대안을 시사함으로써 행정적 의미를 획득하였고 나아가 현재적 의미까지 시사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해석이다. 삼일해방운동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일해방운동이 각각의 영역에서 실천논리를 갖는 것은 죽음을 동반한 해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권의식을 탄생시킨 데 있다. 각 계급의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 민족이 붕괴되어버린 제국주의하의 절망적인 식민지상황을 경험하면서 민권논리를 새롭게 터득하였다. 현실에서의 민권논리는 조선왕조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에 의해 거부당해왔다. 때문에 그 시대의 개혁 사상에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하는 봉건성을 이론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는데, 삼일해방사상은 엄청난 투쟁과 희생을 거쳐 국민주체의 권력순환론적인 민권사상을 형성해 내었다. 국민의 해방된 삶의 의지를 반영한 현대적인 민주사상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정부 구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삼일해방사상은 국민의 피를 바탕으로 민주사상의 뿌리를 내렸다.

둘째 삼일해방운동의 또 다른 함축은 국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민권의식에 대한 상호주관적 의미를 공유하였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민권의식은 국민들이 지녀야 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민족, 민중문화의 원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일해방사상이 함축하는 문화적 의미는 상층계급과 하층 계급이 공유하는 국민문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있다.

세계 삼일해방운동은 체제가 민족조차 무너져버린 상황에 직면하자 국민이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이 제기한 체제에 대한 대안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정부의 구성과 독립부장투쟁론 두가지였다.

내제 삼일해방운동은 계급내의 동지들간에 해방투쟁에의 합의를 이루어 가면서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민주사상과 민중적 민족주의의 토대를 남길수 있었다. 제국주의가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3·1해방투쟁의 정신에 따라 자기 몫을 다하였기 때문에 당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지만 국민들의 지속적인 해방투쟁을 가능케 하였다. 그것은 민족이 무너진 상황하에서 각자톨 희생하면서 민족을 구하고 민주체제를 세우려했던 만큼 자기희생의 정신을 남겼다.

summary

## A Study on Practical Meaning on March First Nation-Liberation Movement

*Ko Chang-hoon*

This thesis uses phenomenological marxist epistemology to re-interpret administrative meanings of March First Nation-Liberation Movement.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interpreting administrative practice growing from the roots of korean thought. Trying to re-interpret the roots of korean administrative thought, I have emphasized (1) the meaning of everyday life which emerges from, korean movementers' painful efforts to reform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against the obstacles of the ruling imperialism, (2) the inter-subjective meanings in the different schools of administrative thought which have advanced and developed this practical philosophy in administration, and (3) the significance of their methods and alternatives for reforming harsh administrative structures.

I assume that practical meaning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thought can be explored from three analytical perspectives; (1) peoples' everyday experience in face-to-face encounters, (2)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hich had been shaped by reflecting on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3) the alternatives for changing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which were developed from the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of everyday life. By exploring March First Nation-Liberation Movement' thoughts in these three perspectives, I have obtained some propositions about their practical efforts in administrative reform.

1. I can find two alternatives common to all movementers, of painful events which occurred from bad administration. For example, many people had been exploited by the ruling class and Japan imperialism in the era of colony. From these observations, I propose that an experience of a bad regime develops the meaningful thoughts in public administration.
2. I can find inter-subjective consciousnesses among people from these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These inter-subjective consciousnesses were expressed by the movement of human and nation-liberation (an liberation movement against the feudal regime and imperialism).

3. I can find that these movementers formulated very practical, instead of contemplative, alternatives. The reason for their practical thinking can be explained by the everyday experience and their inter-subjective consciousnesses against vicious regimes.

These findings support the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of this study. We learn that current praxis in korean administrative thought does and can grow from these movementers' messages, which result from interactions among everyday experiences, consciousness, and regime reform. We learn two lessons from this study. one is that korean administrative scholars should learn from korean history and from those korean administrative movementers who struggled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other is tha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absorb and develop experiences and wisdom from the korean people's minds. This study reminds us that practical-administrative thought is rooted in the historical struggles and practical spirits of the people.